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현안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고찰

이병일* · 정진욱 · 조관제 · 이상기 · 신수철
월성원전·방폐장 환경감시기구*
E-mail: byunglee@wsnesc.or.kr

중심어 (keyword) : 공동조사위원회, 방폐장협의회, 문제인식의 공유, 배려, 주민수용성

요 약

중·저준위 방폐장 사업과 고리원전의 계속운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원자력과 같은 기피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사업자와 규제자의 역할 뿐 아니라 그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수용성도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원자력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신월성 원전건설 중 해수유입으로 건설현장이 침수된 사고와 방폐장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제기된 안전성의혹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활동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관련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였다.

서 론

중·저준위 방폐장은 1986년 안면도와 굴업도를 시작으로 부지선정에 약 19년의 시간을 보낸 후 2003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2005년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되었다. 또 고리원전의 계속운전 역시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야할 원자력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들과의 합의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이는 원자력과 같이 그 시설에 의한 수혜는 온 국민이 나누는 반면 그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리스크는 그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경우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사업의 결정과정

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때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지지와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1].

2009년 4월에 신월성 원전건설 중 해수가 유입되어 건설 중이던 구조물과 건축 재료가 해수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침수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또, 경주에 건설 중인 방폐장의 준공이 30개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6월에 방폐물관리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굴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약지반의 발생과 울진원전의 폐기물포화를 의욕적으로 해결하고자 공사기간을 결정한 것이 준공지연의 주요원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을 해결하고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시의회 그리고 사업자가 포함되는 방폐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신월성 침수사고 공동조사위원회와 방폐장 준공지연으로 야기된 안전성확인을 위한 방폐장 협의회의 구성과정과 활동을 각각 소개하고 그 의미의 고찰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식변화와 주민수용성의 본질을 조명하고자 한다.

조사위원회와 협의회의 이해

1. 신월성원전 해수침수사고 공동조사위원회

신월성원전 침수사고 직후 감시센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고경위와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였다. 주민들의 의견은 침수된

구조물의 안전을 매우 우려하였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는 것이었다. 감시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해결 로드맵과 함께 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사업자 측에서는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전적인 접근을 하였다. 이후 공동조사위원회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콘크리트 학회를 조사단과 자문단으로 각각 선정하고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완료하였다[2].

2. 방폐장 협의회

방폐장의 준공지연 발표이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각종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안전성 의혹에 대한 지역의 입장을 표출하였다. 이때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을 조사단으로 선정하여 준공지연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들을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그리고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2009년 9월 30일 현재 6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그동안의 활동으로는 임원선출, 업무범위를 포함한 협의회규약제정, 전문가 의견청취, 정부진상조사단 설명청취, 자문단 구성에 합의, 자문단 추천 등이다.

토의 및 결론

1. 문제인식의 공유

신월성침수사고의 경우는 공사현장이 침수된 사고로써 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그 현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폐장 준공지연의 경우에는 굴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연약지반의 발생과 울진원전의 폐기물포화를 의욕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무리하게 결정된 공사기간으로 촉발된 안전성오류으로써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문제를 인식하는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방폐장 협의회는 먼저 준공지연이라는 문제를 이해하는 인식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2. 상대의 배려

신월성원전 해수침수사고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들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내용을 사업자와 함께 조정하였다. 그러나 방

폐장 협의회구성 과정은 준공지연 발표 직후부터 주민들은 성명서와 사업자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협의회의 구성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준공지연 발표 이후 사업자의 대응

경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며 진행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사업자를 믿고 공사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연약지반 발생과 의욕적인 공기설정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30개월 연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는 방폐장 부지의 암질등급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며 대형 수직동굴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공학적 보장을 통해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폐장 유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의 정서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방폐장과 같은 시설은 더 이상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합의와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자는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를 떠나 지역에 진실한 사과를 통해 지역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3].

현재 원전주변의 지역주민이 느끼는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원자력이 시작된 70-80년대와는 다르다.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아 졌으며 또한 지역의 주인으로써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원자력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홍성욱, "홍성욱의 과학에세이", 동아시아(2008)
2. 월성감시기구, "신월성침수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활동 보고서"(2009)
3. 이병일, "신월성원전 건설 중 해수침수사고와 해결 과정의 고찰" 추계방사성폐기물학회지(2009)